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모델 정립 본격화	1
강원도민일보	22면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경제산업공헌대상	1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도청 신청사 예정 부지 매입 심의	2
東亞日報	C01	재발 잦은 대상포진, 앓고 난 뒤라도 백신 접종해야	3
江原日報	11면	원주 미술축제 '아트페스티벌' 개막	4
강원도민일보	15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장서 영월군의 날 행사 성료	5
江原日報	10면	천자문맥주공장 기공식	5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 정부 4대 특구 선제 대응 필요성	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6
江原日報	04면	'아들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국감 달군다	7
江原日報	01면	청소년올림픽 100일 앞 ... 전국적 붐업 나서	8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정부, 동계청소년올림픽 추가 예산 부담률 줄다리기	8
江原日報	02면	인제 가을꽃축제 16만명 몰려 ... 이어지는 흥행가도 '웃음...	9
강원도민일보	04면	'노란버스 논란' 강원 전세버스 계약 취소 피해액 2억4239...	9
강원도민일보	04면	"소양강·충주댐 주민피해 공론의 장 지속 상생발전 도모"	10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홍천 '바이오 특화단지' 공동유치 도전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 지원 절실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이래서야 첨단산업 발전하겠나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道 현안 해결의 기회로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국도·국지도 건설, 정부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14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01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모델 정립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

본지 주최 주관 국제심포지엄
일본 마니와시 성공 사례 소개
김 지사, 의견 수렴·반영 약속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정립,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재각인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후원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이 10일 오후 국회 고성연수원 수원 중강의실에서 열렸다.

오타노보루 마니와시장은 “지역자원을 살린 돌아가는 경제의 확립”을 주제로 한 특별기조연설을 통해 “마니와시는 80%가 산림이고 일본 유수의 목재 집산지”라며 “2014년에 바이오매스 산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이하 산림수도 심포지엄)이 10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진태 도지사, 일본 오타 노보루 마니와시 시장,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학계 산림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중석

업도시로 지정됐고 2018년엔 스마트 미래도시, 2022년엔 탈탄소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자원순환형 지역경영과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대표도시가 됐다”고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비전

을 찾고 모델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촌자본주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며 “전 지구촌을 선도할 산림경영의 모델과 비전을 찾는 오늘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산림경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재생

모델을 만든 마니와시의 산촌자본주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방향 설정에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며 “산림의 혁신은 늘변방에서 시작된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분야의 획기적인 전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우중춘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정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탄소

중립시대를 맞아 강원산림진흥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 또,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산림정책 발굴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도와 산림엑스포 조직위,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산림조합 강원본부 및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은·이설화 ▶관련기사3면·상보12·13일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22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경제산업공헌대상 김기홍 강원특자도의회 부의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13인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경제산업공헌대상을 받았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 10 10 ()

강원도의회, 도청 신청사 예정 부지 매입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강원도의 토지 취득 계획이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번주 현지 실사를 벌여, 다음 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강원도가 매입하는 땅은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 땅의 공시지가가 165억 원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실제 토지 매입 자금이 450억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성은

재발 잦은 대상포진, 앓고 난 뒤라도 백신 접종해야



몸 한쪽에 띠 모양의 수포가 나타났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대상포진이 걸린 환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생긴 붉은 반점과 물집. 대상포진의 주된 증세로 심한 가슴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

대상포진을 띠모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다. 띠모처럼 보어도 물집이 띠 모양을 형성하고 꾸시고 아픈 통증이 생기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통증의 왕' 대상포진 관리법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부에 물집과 발진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극심한 통증... 방치하면 신경 손상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소아기에 수두를 앓고 난 이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재활성화돼 발생한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서 상처를 내어 수포를 형성하고 한쪽으로 띠 모양의 수포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수포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신경이 분포하는 신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몸살감기와 유사한 근육통, 두통 등으로 비교적 증상이 가벼워 단순한 환절기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포가 점점 올라오고 발생 부위에 따라서 뻣뻣한 바늘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신경통이 나타난다.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누군가는 참을 수 있는 통증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할 수 있다.

적기인 72시간 이내에 내원해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 치료를 하면 빠르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병원에 오면 바이러스로 인해 신경이 손상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후유증이다. 손상된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뇌로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보내 감각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다. 초기 대상포진보다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통증이 만성화돼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만약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이 된 상태라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해야 한다.

치료는 주로 대상포진 신경 차단술을 적용한다. 컴퓨터 영상 장치를 이용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신경절을 찾아낸 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신경에 나타난 염증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예방접종, 발생률 절반으로 낮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포진 백신은 발생률을 50% 가까이 저하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환

율을 약 60% 저지한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접종을 권하지만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거나 대상포진이 이미 발생한 젊은 층도 신경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 된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 발생률을 낮출 수 있고 걸리더라도 가벼운 통증만으로 지나갈 수 있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 사백신 2종으로 나뉜다. 생백신은 50세 이

나래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타박스가 최고 40만 원, 스카이 조스타의 경우 최고 30만 원에 이른다.

백신 접종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약값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인동시의 경우 취약 계층에 17만 원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와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사후 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라며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등에 대한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많이 들어 취약 계층의 부담이 큰 가운데 보건 당국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자영 의원(민주당-비례)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 사백신을 2회 접종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지침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 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 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돼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전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홍은심 기자 hongensim@donga.com



대상포진 백신

72시간 안에 치료를

신경통으로 번지면 합병증 위험
면역력 떨어지는 중장년층이나
어려서 수두 앓았다면 접종해야

비싼 접종비는 걸림돌

백신 비용 최대 40만 원 비급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 나서

상에서 1회 권장되고 임신부나 면역 저하자에게 접종해서는 안 된다. 사백신은 만 50세 이상 및 만 19세 이상 면역저하자에게 권고되며 2회 접종한다. 2회 접종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백신도 역시 임신부에게 접종해서는 안 된다. 문수연 강동경희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상포진은 재발이 많으므로 과거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접종비만 40만 원... 고위험군 대상포진 백신 지원 필요

하지만 백신 접종비가 비싸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은 한 국염에스디의 조스타박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즈,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싱그릭스 등 세 가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

江原日報

2023 10 11 ()

11



◇원주 최대 규모의 미술 축제를 지향하는 '아트페스티벌' 개막식이 10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원주 미술축제 '아트페스티벌' 개막

지역 작가 7명 메인 기획전시
원주미협 정기회원전 등 개최

【원주】원주 최대 규모의 미술 축제를 지향하는 '아트페스티벌'이 10일 개막했다.

10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원제용 도의원, 차은숙·홍기상 원주시의원, 김봉열 원주예총 회장, 양현숙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장,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기획인력과 손잡고 선보이는 첫 번째 시각예술장르 중심 기획전시다.

올해 축제 주제는 자발순환의 회복을 뜻하는 ROSC의 시즌1 'CODE BLUE'로 지역을 넘어 주목받고 있는 원주 작가

7명이 메인 프로그램인 기획전시 'CODE BLUE'를 꾸민다. 행사는 내달 4일까지 이어진다.

제54회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 정기회원전도 원주예술제 일환으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원주아트갤러리는 10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전시 '갈리칸투(GALLICANTU)'를 통해 닭을 주제로 한 드로잉 작품 40점을 소개하고 (사)한지개발원은 기획전 '강원의 재발견'을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진행한다. 제1회 원주시생활예술제전은 12, 13일 장미공원에서 가수 이하평, 신욱호, 이동수, 김미경과 댄스, 우쿨렐레, 농악, 오카리나 무대 등으로 꾸며진다. 김설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15



영월군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영월군의 날 행사에서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장서 영월군의 날 행사 성료

장릉 낮도깨비 공연·홍보부스 운영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기원 '영월군의 날' 행사가 10일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및 군의원·김길수 도의원·김영언 교육장·김준기 산림조합장·엄연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은 이날 13개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720여 명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산림엑스포 성공을 기원했다.

상설공연장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도깨비 설화를 담은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2개 홍보부스에서는 엑스포 참가자 및 방문객에게 캠핑장 할인권과 목공원데이 클래스·전기카트 체험권 등의 관광서비스 상품을 반영한 다채로운 답례품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유인하고 관광 마케팅 및 농특산물·사회적기업 생산물 등도 홍보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강원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23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입장권 2023매 구매 약정식을 개최하는 등 협력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했다.

방기준

江原日報

2023 10 11 ()

10



천자문맥주공장 기공식 천자문맥주공장 기공식이 10일 홍천군 남면 용수리 천자문맥주공장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10 11 ()

03

강원자치도, 정부 4대 특구 선제 대응 필요성

본보·강원연구 포럼 ‘기회·교육·도심·문화 특구’ 유치 논의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일보와 강원연구원이 10일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전략’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위의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자유특

구는 강원자치도 교육특구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시범도시를 위한 기획이 추진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4대 특구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문이사는 “정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먹고사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유능한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은 “고교를 활용해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

고 했고, 이영욱 강원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올 학생들을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문화특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원도에 더 많은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와 랜드마크보다는 마을과 동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강원특별법을 활용하면 기존 특구와의 차별성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특구를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뿐 아니라 산업과 대학 등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10 10 ()

[동정]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1일 오후 6시30분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홍천종합예술제 잔치마당 및 홍천군민의 밤에 참석.

江原日報

2023 10 11 ()

04

‘아들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국감 달군다

교육위, 정 변호사 증인 채택 민사고 재학 당시 관련 의혹 질의
민병희 전 교육감도 증인 출석 요구 지역 교육계 관심 집중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민병희 전 교육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 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횡성 민족사관고에 재학 중이던 2018년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불복 소송 등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다가 이듬해 2월에 서야 전학을 가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은 단독으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를 개최, 민사고 교장과 학폭 담당 교사,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향해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도교육청에는 113건에 달하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오는 17일 경북대에서 열리는 도 교육청 및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의 감사도 관심사다. 교육위는 통일 교육 교재의 편향성 등을 질의하겠다고 하며 민병희 전 도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각종 현안에 답할 예정이어서 전·현직 교육감이 나란히 국감에 출석하는 풍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북한의 ‘남침’ 사실이 누락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수록돼 있다며 도교육청이 2020년 제작·배포한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을 전량 회수해 폐기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었다. 이 밖에도 교권 보호 관련 사안 및 지난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던 강원학생성장진단 평가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있어 관련 질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도교육청에는 10일 현재 교육위 공통자료 223건, 국회의원 개별 자료 528건 등 751건의 자료 제출 요청이 접수됐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2023 10 11 ()

江原日報

01

청소년올림픽 100일 앞 ... 전국적 붐업 나서

오늘 서울서 G-100 기념행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스포츠 축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G-100 기념행사를 연다.

김예리 홍보대사와 강원지역 학생팀의 올림픽 주제곡 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한 성화의 안치행사가 펼쳐진다. 이어 김연아 홍보대사가 올림픽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한다. G-100 기념행사 이후 성화가 전국을 순회하는 성화 투어가 진행돼 전국적인 붐업에 나선다. ▶관련기사 21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지역에 서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14

성화 안치행사 이어 ‘투어’ 돌입
도-조직위, 혹한·안전 대책 집중
김 지사 “정부와 잘 협력해 준비”

일간 열린다. 전 세계 80여개국 청소년 선수 1,900여명과 대회 관계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바이애슬론, 스키 등 7개 경기 15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관중 등 연인원 65만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청소년올림픽까지 개최한 국가가 된다. 또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강원자치도는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허브로 거듭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

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토대로 K-콘텐츠를 알리는 축제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하는 만큼 대회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달 중 경기장의 보수 등을 마치고 조직위에 인계할 방침이다. 도와 조직위는 남은 100일간 붐업과 함께 혹한과 안전 대책 등을 집중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와의 예산 분담 문제가 남아 있으나 도는 이 역시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올림픽 예산은 700억원으로 강원자치도는 이 중 200억원을 부담했다. 13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분담비율을 두고 도와 문체부 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진태 지사는 “문체부와 잘 협력해 100일밖에 안 남은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02

도-정부, 동계청소년올림픽 추가 예산 부담률 줄다리기

도·조직위 134억원 추가 요청
문체부 “67억원씩 나누자” 제시
김 지사 “중앙정부 더 부담해야”
협상 한달째, 내달 총예산 확정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2024강원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추가 소요 예산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이견이 팽팽해지는 등 논란이 일며 자칫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2024강원대회는 국가적인

행사인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지 취재 결과, 2024강원대회 운영 예산은 총 700억원으로 이중도가 200억원(29%)을 출연했다. 나머지는 국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예산, 2024 강원대회 조직위 자체 마케팅 수입 등이다. 그러나 도와 2024조직위는 대회 운영 인력 관리 명목 등으로 134억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이는 새만금 잠버리 대회 운영 파행과 맞물려 선수 편의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조직위의 예산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50%, 67억원씩 부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

은 3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는 “2024강원대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다. 중앙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4 강원대회 개막 100일 전 행사가 11일 서울광장에서 드디어 열린다”며 “조직위가 대회운영과 인력 관리를 위한 예산 134억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문체부와의 협상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승적 양보를 강조했다. 2024 강원대회 총 예산은 내달 수립되는 제4차 재정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덕형

2023 10 11 ()

江原日報

인제 가을꽃축제 16만명 몰려 ... 이어지는 흥행가도 '웃음꽃' ⁰²

부행사장 인파 폭발적 증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주행사장인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뿐 아니라 속초·고성·인제·양양의 부행사장을 찾는 인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막 이후 초반까지 숲방울전망대와 푸른지구관 등의 콘텐츠를 앞세운 주행사장이 흥행을 견인했다면 중반 이후에는 부행사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부행사장은 고성 DMZ박물관·통일전망대, 속초 설악산자연식물원·국립등산학교, 인제 용대관광단지,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등이다.

산림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9일 기준 104만1,057명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관람했으며 주행사장 관람객은 41만2,231명, 부행사장은 62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부행사장 관람객이 주행사장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8일에는 부행사장 입장객만 15만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행사장별로 보면 속초 설악산자연식물원 19만3,217명,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 19만2,267명, 인제 용대관광단지 16만6,723명, 고성 7만2,078명 등이다. 특히 15일까지 진행되는 인제 용대관광단지 가을꽃축제 관람객이 크게 늘면서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속초와 양양 역시 설악문화제, 송이·연어축제와 맞물려 많은 사람이 몰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관람객 주행사장 앞질러

속초·양양·인제·고성 등 다양한 연계 행사 인기

“단체 관람객보다 일반 관람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고무적”이라며 “특히 주행사장과 함께 행사를 공동 개최 중인 부행사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엑스포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흥행에 한몫하고 있다. 엑스포 기간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서는 60개 행사가 열린다.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참여의 날 행사를 비롯해 산림청장배 레포츠대회(트레일러닝, 패러글라이딩, 노르딕워킹, 산악자전거), 전국산림조합장워크숍, 임업단체총연합회 심포지엄,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산림경영인대회 워크숍, 강원 대표 특산물 특관전, 산림기술사협회 세미나 등이 열렸다.

또 11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도 시·군 임원 및 읍·면회장 역량강화 교육,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 임도설계시공 기술교류 워크숍, 12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직원 워크숍, 2023 통일수련회, 13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14일 강원자치도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 15일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대회, 16일 강원임업인 한마음대회, 18일 산의 날 기념행사, 19일 임업기능인경진대회, 선도산림경영관계자 워크숍, 20일 강원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식 등 31개 행사가 열린다.

최기영기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주행사장인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뿐 아니라 속초·고성·인제·양양의 부행사장을 찾는 인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진태 지사가 10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의 집라인 탑승을 돕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04

'노란버스 논란' 강원 전세버스 계약 취소 피해액 2억4239만원

현장학습 줄줄이 축소에 취소 79건

업체 위약금 청구 소송 가능성 낮아

속보=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위법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 진행이 줄줄이 취소·축소(본지 9월 12일자 웹보도 등)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강원지역 전세버스 업체 계약 취소는 79건으로 집계됐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전국전세버스

운송조합연합회가 집계한 전국전세버스 업체의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703건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61억40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역의 경우 취소된 계약은 79건, 발생한 피해액은 2억4239만원으로 확인됐다.

강원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계약취소건수를 보내준 업체를 통해 파악된 건수만이 정도”라면서 “실

제 취소 건수는 집계된 것 규모보다 클 것”이라 말했다.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전세버스 업체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강원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을 별도 대책 없이 뒤늦게 올해 들어 발표한 점 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민엽

2023 10 11 ()

강원도민일보

04

“소양강·충주댐 주민피해 공론의 장 지속 상생발전 도모”

본지-춘천·충주시의회 주최
공동세미나 정기회의 개최 결정
지역 자원세 도입 등 방안 논의

춘천시의회와 충주시의회가 소양강·충주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적인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댐 주변·상류지역의 환경서비스의 합당한 대가를 위해 ‘(가칭)댐용수세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춘천시의회, 충주시의회,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한 소양강·충주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한 춘천시의회·충주시의회 공동세미나가 1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춘천시의회·충주시의회는 댐 주변지역의 피해를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이 댐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 실현방안도 도출될 수 있도록



춘천시의회, 충주시의회,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한 소양강·충주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한 춘천시의회·충주시의회 공동세미나가 10일 춘천시의회에서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육동한 춘천시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댐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찾아 구성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발전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해수 충주시의장은 “충주시와 춘천시가 우호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빠른 시간 안에 충주에서도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겠다”며 “힘을 합쳐 대한민국 댐 주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고 화답했다.

이날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정책, 지역상생을 위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제철 춘천시의원, 박상호 충주시의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댐

주변회복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진장철 강원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강명철 충주시의원, 권용범 춘천경찰서 사무처장, 박일선 전국담연대 의장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손실, 지역자원세 도입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문숙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와 주민 주도로 댐 주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충주시와 춘천시는 동병상련의 관계”라며 “불균형 요소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 의회의 공동세미나가 이슈를 전국화하는 발화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은 “소양강댐, 충주댐 소재지역 주민들의 행방지수가 높아지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은

▶상보 12일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09

춘천·홍천 ‘바이오 특화단지’ 공동유치 도전

이달 중 시·군 업무협약 체결
공모 연구용역 연말까지 완료
전국 11곳 도전장 경쟁력 관건

춘천시가 홍천군과 함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한다. 육동한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도전을 발표했다. 시는 홍천군이 현재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춘천의 바이오 예방·진단 분야 역량과 힘을 합쳐 ‘융합첨단바이오 의약산업’ 특화단지를 공동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홍천군과 업무협약도 맺을 방침이다. 지역내 선도 기업, 대학,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으로 착수해 연말까지 완료한다.

춘천시는 홍천군과 함께 ‘첨단바



육동한 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오산업 벨트’를 구축해 융합 첨단 바이오 의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은 예방과 진단, 홍천은 항체 중심으로 역량과 힘을 합쳐 늘어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대학 자원과 연계한 인재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까지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춘천과 홍천의 특화단지 대상지는 후평산단, 남춘천산단, 동춘천산

단, 거두농공단지,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예정지, 북방농공단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특화단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에 전국 7개 특화단지를 지정, 최근 바이오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 규제 완화, 세제 예산 지원, 융적률 완화, 전력용수 기반 시설 패키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건은 경쟁력 확보다. 현재 경북 안동, 충북 오송, 인천 송도 등 바이오 분야에 만만치 않은 저력을 자랑하는 전국 11개 지역이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질병청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도 난임전문병원, 임상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바이오뱅크 등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동한 시장은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춘천이 갖고 있는 한계를 홍천이 보완하면서 첨단지식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 19

동계청소년올림픽 정부 지원 절실

-오늘 성화 봉송 대장정, 예산 추가 투입 필요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강원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국제 스포츠 행사로, 세계 속의 강원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행사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관광·문화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살려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대회 운영과 인력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열립니다. 사전준비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대회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 4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구촌 80여개국의 청소년 선수 1900여명과 대회 관계자 등 1만 5000여명이 참가합니다. 동계올림픽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바이애슬론, 스키 등 7개 경기 15종목에 걸쳐 펼쳐집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 성화 투어를 시작해 전국 장정에 나섭니다. '꿈과 열

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돼 빛나는 미래를 향해 여정을 떠나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는 성화 봉송은, 국내 23개 도시를 80일 동안 순회합니다. 서울과 부산, 세종, 제주, 광주에 이어 11월 7일 속초 설악고교와 12월 28일 강릉중학교에 도착해 대장정을 마칩니다. 성화 투어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차질 없는 경기 진행이 우선입니다. 경기장과 부대 시설 등 시설 점검은 물론, 행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회 운영 예산은 총 700억원으로 이중 도가 2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예산, 2024 강원대회 조직위원회 자체 마케팅 수입 등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도와 2024 조직위는 대회 운영 인력 관리 명목 등으로 134억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수편의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임기 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1 ()

/ 19

이래서야 첨단산업 발전하겠나

-산업자원부 국가연구개발 집행액 0.6% 불과하다니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강원특별자치도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첨단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답답함이 앞섭니다. 지리적으로 첨단산업 육성 여건이 어려운 제주를 제외하면 인구를 강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16위 세종시와의 차이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R&D 총투자액도 강원은 15위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강원지역의 첨단산업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박영순 국회의원이 발표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집행된 산업부의 R&D 예산은 2조 8181억원입니다. 그중 강원은 180억원이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북(159만명) 3.2%, 대전(144만명) 7.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에서 5배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예산 배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투자액에서도 강원은 15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강원이 3581억원인 것에 비해 경남은 2조 27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열악한 강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강원보다 무려 10배 넘게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다른 시도에 견주어봐도 시간을 아껴 속도를 내야 하는 연구개발에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투입해 온 행태는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 쏠림과 경제 집중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강원 대표적으로 첨단산업 현실을 악화하고 미래를 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리한 격차를 반길 기업과 연구소, 연구자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국비 예산 중 R&D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도내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목표인 '미래산업'에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려면 이런 실질적인 사안에서 도정과 정치권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기술기반과 인재가 취약한 곳에서는 첨단산업 육성도, 업체 유치도, 기업 창업도 버겁습니다.

江原日報

2023 10 11 ()

/ 19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道 현안 해결의 기회로

10일부터 실시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즉,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감 때면 여야의 정치 공세가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정

치 세력을 흠집 내기 위한 기회로 삼으며 무더기 증인 신청, 아니면 말고 식 한탕주의 폭로전, 면박 주고 호통치기 등으로 일관해 왔다. 여야는 9일 현재까지 일반증인, 참고인 285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국감장에 불러 나오는 기업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증가 추세다. 증인 채택은 각 상임위에서 개별 의원이 신청한 다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일단 “센 사람을 불러놓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 기업 총수나 대표를 무작정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감 무용론이 비등해진 것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 수준 이하의 행태가 주요 원인이다. 국

회는 만약 이번 국감에서마저 구태를 반복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국감을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현지 감사를 진행한다. 김진태 도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서 받는 첫 번째 국감이다. 감사위원으로는 국민의힘 4선 권성동(강릉)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여당 간사, 김용관·박성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권인숙·오

영환·이해식·송재호·최기상 위원이 배정됐다. 김 지사는 올 3월 일과 중 골프연습 논란, 지난해 9월 말 불거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여야, 4월 총선 앞두고 주도권 다툼 불가피
행안위,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현지 감사
의원들에 건의사항 등 지역 논리로 무장을

있다. 이와 함께 최문순 전 도정에서 불거진 ‘알펜시아 입찰과정 담합 의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도 감사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명쾌한 해명으로 더 이상 도정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감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쟁으로 비치면 곤란하다. 지역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얻는 전기가 돼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0 11 ()

/ 19

道 국도·국지도 건설, 정부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18개 시·군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6억원 규모로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도는 국도 22개, 국도대체우회도로 7개, 국가지원지방도 12개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5조1,700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까지 전국 건의노선 중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 200여개 사업을 압축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로의 신설, 확정을 위한 사업의 당위성·경제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내 도로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도와 국지도는 지역의 모세 혈관과도 같은 존재다. 도로가 뚫리면 정주여건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지역 주민의 발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강원지역은 그동안 도로 개설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그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의미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국도·국지도 건설을 위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국도·국지도 노선은 600여곳에 달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로망 확충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게 도로 개설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지자체가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다. 따라서 가장 큰 관건은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느냐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가 요청하는 도로들은 국토 이용률 제고에 혁혁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도가 요청한 도로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수십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그만큼 절실하지만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극복하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철저한 공조가 필수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왕성히 가동할 때 비로소 도내 국도·국지도가 정부의 건설 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